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에너지 정책 방향은?

유류세 10% 인하 대표적 서민경제 공약

대한민국을 이끌 제 17대 대통령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선출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참여 정부'의 바통을 이어 받아 '실용 정부'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형식과 틀에 구애 받지 않고 일 잘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성공한 대기업 CEO 출신답게 추진력과 카리스마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에너지 산업 역시 이명박 당선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눈을 맞추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 갈 대통령 당선자의 이념이나 경제 철학이 에너지 산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유류세 10% 인하 - 일각서 '인기 영합적 정책' 지적도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 시절 내건 서민경제 관련 공약중 기름값 인하를 빼놓을 수 없다.

통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대출이자에 더해 기름값을 7대 서민 생활비 거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중 기름 값과 관련해서 유류세 10%



“

관련법 국회 논의중

세수 감소 불구 가능성 높아

”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사실 유류세 10% 인하 공약의 유례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2005년 8월 유류세 10% 인하 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수년여 동안 계류되어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국회 논의가 재개된 상태다.

일단 유류세 10% 인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 여부에 따라 실용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석유에서 부과된 세금이 25조 9430억원으로 이중 10%를 감면하면 2조 59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유류세 10% 인하로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석유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석유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해법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포기하고 기름값 낮추기에 성의를 보인 만큼 정유사를 포함한 석유업계 역시 어떤 식으로든 기름값 안정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올해 역시 국제유가가 지난해 보다 최고 16%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가상승이 유류세 10% 인하효과를 상쇄해 소비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부터는 고유가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 석유업계가 더욱 자유로워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세전 공장도 가격이 리터당 5~600원 선에 불과하고 주유소의 매출 이익율도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석유업계가 기름값 안정에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석유업계의 반응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와 함께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사용되는 LPG 특소세와 가정 취사용 프로판, 도시가스에 매겨지는 특소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난방 연료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도 현재보다 10%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전체 국세중 간접세인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징수의 안정성 면에서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에 있고 상호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현실적인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갖고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정책 공약을 점검했는데 유류세 인하 공약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서 서강대 이인실 교수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는 세수 손실은 크나 실질적인 도움은 적은 인기 영합적인 세금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자원개발·신재생E 확대에 틈틈이 관심 보여

이명박 당선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주자 시절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 자원개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3월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최익수 원장과 연구원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의미있는 얘기를 꺼냈다.

“지난 해(200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도 에너지문제였다”고 회고한 이명박 후보는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에너지 확보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정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1 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과학기술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2대 대형 프로젝트로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건설과 ▲ 신에너지 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천명했다.

‘에너지자원은 경제 발전은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 에너지 자립국 나아가 에너지 수출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보이는 관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언급들로 실용 정부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신 에너

지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에 확정된 이후인 지난 달 21일 클리브 이바센 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의 예방을 받은 이명박 당선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히 동부 시베리아 일대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해 동부 시베리아 개발을 함께 하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에 있고 상호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PNG 도입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자의 당시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난 2004년 9월의 러시아 국빈 방문시 가스산업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며 러시아에 대한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와 가스 도입의 계기를 열었고 이후 꾸준한 협상의 결과로 산업자원부는 최근 러시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를 PNG

형태로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동 조사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역대 정권의 2배가 넘는 석유와 가스 물량을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했고 무려 17개국과 정상 자원 외교를 벌인 참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성과를 감안하면 또 이명박 당선자가 언급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관을 종합해보면 실용 정부 역시 해외 자원개발과 이를 위한 정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공학한림원의 에너지자원위원회(위원장 손재익 서울산업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0일 ‘미래 신에너지에서 새 금맥을 캐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희망하는 ‘국가 에너지 아젠다’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 에너지신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기후변화협약 대응 ▲ 에너지산업 활성화 ▲ 에너지 수요관리 ▲ 동북아 협력 ▲ 전력 생산용 에너지원 구성 전략 등 7가지를 제시했고 이 보고서를 한국공학한림원의 공식 입장으로 이명박 당선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